

정동영 “댓글조작방지법 당론 발의”

“댓글조작 통한 온라인 여론 왜곡, 대의민주주의 심각한 위기 불러”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댓글조작방지법’을 민주평화당 당론입법 발의한다. 정동영 의원은 23일 민주평화당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댓글 조작을 통한 온라인 여론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부른다.”며 댓글 조작방지법을 만들어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협의를 거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에 댓글을 달거나 추천을 누르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의원 관계자는 또 “정동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국정원과 국군기무사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온갖 음해와 공작 피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라며 “국가권력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이들도 국민여론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 민주주의 훼손과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설득해 ‘드루킹 특검 합의’와 ‘정쟁 중단 선언’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의 주도력을 과시한 것”이라 평가하고 “드루킹 특검합의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순직 조종사 유가족 위로하는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순직 조종사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지난 5월 F-15K 전투기를 타고 경북 철곡에서 작전임무 중 순직한 박기훈 대위의 어머니 신현숙씨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5년간 행정기관 빅데이터 활용 40배 ↑

행정기관들의 빅데이터가 민원을 포함한 공공행정, 문화관광, 국민안전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최근 5년(2013~2017년) 간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43개, 지방자치단체 243개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현황 결과에 따르면 782건의 분석사업이 추진됐다. 빅데이터 사업은 건수 기준으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2건(8기관), 2014년 67건(49기관), 2015년 116건(68기관), 2016년 140건(89기관), 지난해 447건(169기관)로 분석됐다.

특히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지자체의 빅데이터 분석사업 건수는 67건에서 32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공공행정(236건), 문화관광(131건), 재난안전(74건)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됐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민원·소셜·홈페이지 분석 등이 다수 진행된 사업이었다.

공공행정은 민원 분석, 빅데이터 활용 여론 분석, 홈페이지 게시물 분석 등이었다. 문화관광은 지역축제 분석, 방문객 분석, 빅데이터 기반 지역관광 모델 마련 등에서 활용됐다. 재난안전의 경우 폐쇄회로(CCTV) 현황과 우선설치지역 분석, 화재예방을 위한 분석 등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與 “경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여야 간 강대 강대치가 연출되면서 정국은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한 뒤 우원식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문제와 관련하여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면서 “지도부는 경찰이 조사를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아침 드루킹 사건을 야당이 모여서 대선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크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손을 잡고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결시키는 대선불복 대열에 함께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규탄한다. 드루킹 사건을 대선불복과 연계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며 전혀 관계없는 사건을 몰아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특검 찬반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지도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고 다른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마지막 시한인 이날까지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후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국민투표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안 될 경우 오늘 지도부 논의를 통해서 이후 처리방안에 대해 내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야당과의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 “오늘 따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 지난주에 여러 노력은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면서 “야당이 국회 정상화와 특검을 연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파행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회의를 소집했으나 민주당이 국민투표법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불참하겠다고 선언해 무산된 것이다. /뉴시스

이정미, 한진家 갑질 “법의 심판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3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메일 사과나 두 딸의 경영일선 후퇴로는 무마될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조현민 전무의 이번 폭력 사건을 비롯한 항공법 위반, 조씨 일가의 밀수행각, 호텔공사비 30억 횡령 등 드러난 혐의만 보아도 이미 이들은 범죄소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뚱개고 있다. 사정당국이 내사에 착수하자 마지못해 발표한 사과문”이라며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또한 “조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경영인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꿈수는 안 통한다”며 “조 회장이 해야 할 진정어린 사과는 가족경영 포기, 수사에 착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우원식 “국민투표법 무산 책임, 한국당이 져야”

“한국당에 대해 국민이 투표를 통해 매서운 심판을 내릴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개헌과 관련해 “오늘 오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아 무산되면 모든 책임은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개헌 반대 세력이자 호헌 세력인 한국당에 대해 국민이 투표를 통해 매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 동시선거를 결정할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처리시한이 임박했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국민투표법 처리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없으면 국민투표법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국민투표법이 처리가 안되면 6월 동시 투표 개헌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은 그 자체로 개헌을

완성하는게 아니다. 여야가 합의한 발의시한인 5월4일까지 개헌 논의를 2주간이라도 더 하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 왜 (20일로 합의했던) 본회의 하느냐”며 “이유는 분명하다. 15개월 동안 개헌에 발목만 잡던 한국당이 특검을 빌미로 개헌을 완전히 건어차겠다는 것 아니냐. 염동열, 홍문종 체포동의안 자동상정을 막아보겠다는 알박관술수입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도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1일 북한의 핵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조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한국당 등 일부 수구세력은 비핵화를 위한 걸음마다 위장평화쇼, 의미없다는 평가절하로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색깔론에만 매달려 국민의 외면을

받을지, 갈라파고스처럼 단절되고 고립된 냉전세력으로 남을지 평화와 번영 세력으로 함께 갈 것인지 진지하게 숙고를 바란다”며 “외교안보문제 만큼은 국익을 먼저 생각해줄 것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뉴시스

남북 3차 실무회담 종료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의전·경호·보도 관련 논의를 위한 3차 실무회담이 23일 관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약 3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담은 오후 1시30분에 종료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지난 19일 5시간15분 동안 진행된 2차 실무회담에 비해 2시간가량 짧았다. 청와대는 대표단이 돌아오는 오후 5시쯤 실무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